

## 민선 4기 과제와 전망

## ⑤ 성장동력에 승부 걸어라

## 전략산업 육성이 살 길이다

민선 4기 광주·전남 시·도정은 지방자치의 토대인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걸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시·도 모두 이전까지 획기적인 지역생산력 증대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일부는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선 4기는 전략산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중차대한 책무를 안고 있다.

◇광주시

정책 기조가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사업' '복지'에 집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달 중에 민선 4기 정책과제들을 선정해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과 행정 전문가들은 이제 광주시가 새로운 정책 발굴 보다는 내실있는 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달라진 광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운다.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지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이상 끌어 올리고, 사회복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폐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

## 광주 자동차·백색가전·광산업 등 경쟁력 우월

## 전남 '권역별 개발 대규모 프로젝트' 성공해야

을 갖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백색가전 및 광산업 등의 기반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미 추진중인 디지털정보가전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의 촉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광주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 사업이 광주의 도시환경과 지역민의 생활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고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국 하위권인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 및 산업 발굴도 시급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짚을 것이다.

또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 외국어 교육과 특수교육, 영재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전남도

민선 4기는 지역의 '명운'을 걸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이전까지 낙후의 대명사로 꼽혔던 전남으로서는 민선 4기를 '대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실상 이 시기에 가난과 낙후의 굴레를 벗어날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민선 3기말까지 권역별 대규모 프로젝트의 바탕이 마련되면서 4기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지역개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선 서남권의 양 대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J프로젝트), 무안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2005년 전남도청 이전으로 남악신도시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또 중형조선산업

단지 및 대체에너지 산업도 중점 육성됨으로써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전남부관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천연 자원개발과 한방산업 육성, 생태 건강도시 건설로 권역별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또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여수산단·광양제철을 포함해 전남지역 생산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동부권은 신산업 기반 활성화로 토대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광양 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지역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와함께 뛰어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인구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실천도 민선 4기 도정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과제다. 〈끝〉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盧대통령 21일 국회서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21일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일 오후 양당 수석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세부 의사일정에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가 된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연설 내용과 관련, "그동안의 주요 입법과 관련한 국회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예정돼 있는 나머지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사법개혁, 국방개혁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국회연설의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앞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대통령의 국회연설 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퇴임 뒤 봉화마을로”

靑,盧대통령 집터 연내 발표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후 귀향 계획의 일환으로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일대에 주택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대통

령이 퇴임후 살아야 할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고향에 정하기로 했다”며 “귀향한다는 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데, 예외규정을 적용하거나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부적절해 주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만의회 '천총통 탄핵안' 상정

대만 압법원은 12일 아당이 밸의한 천수 이언(陳水扁) 대만 총통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압법원 여야 대표들은 간담회를 갖고

13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의를 소집, 국민당

과 친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천 총통 탄핵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해지구 지원 예산안 등 14개항의 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현정사상 압법원이 총통 탄핵안을 처리하는 일은 처음으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천 총통은 대만 역사상 처음 탄핵을 당하는 총통으로 기록된다.

/연합뉴스

과 친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천 총통 탄핵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해지구 지원 예산안 등 14개항의 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이상열 대변인은 “당세 확장과

외연 확대를 위해 공동대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동대표제 도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장 상 전 선대

본부장이 한화갑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김근태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의 타당성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면 당 정책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보완 여지를 내비쳤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번주내에 재정경제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 당협회의 갖고 부동산 세제 정책 조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맞서 청와대는 12일 청와대 브리핑의 부동산 특별기획시리즈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주장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세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고, 실질 양도세 부담률은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주택에 헤택을 주게 돼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방주택 등을 역차별 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인 김부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당연히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저희로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이호웅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에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막는 조치를 강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도 '지도체제' 갈등 예고

## 현역의원들 韓대표에 회의감

## “공동대표제 도입 이해 못해”

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한화갑 대표가 당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안건에 도 없었던 공동대표제 도입 문제에 제기된 직후, 당헌·당규 개정 소위가 꾸려져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동대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화갑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심각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어 추후 당 운영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 소위’를 열고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대표제 도입을 중앙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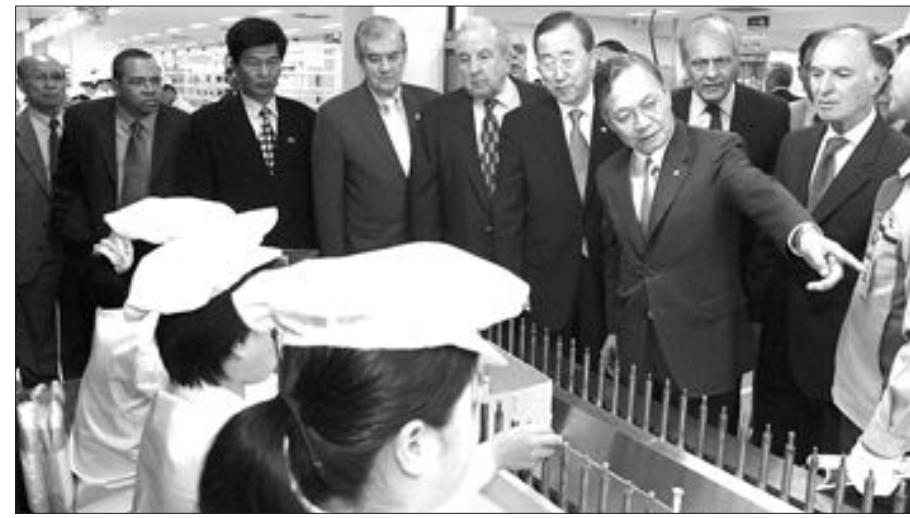
‘당헌·당규 개정 소위’가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도체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와관련 이상열 대변인은 “당세 확장과 외연 확대를 위해 공동대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동대표제 도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공동 대표제 도입은 정계 개편”을 앞두고 민주당의 활로를 찾기 위한 대책이라며 “특히 장상 전 선대본부장은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26일 실시되는 국회 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 공직후보자자격 심사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16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주한 외교관 76명이 12일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 부천공업

/개성공단=연합뉴스

과 친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천 총통 탄핵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해지구 지원 예산안 등 14개항의 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이상열 대변인은 “당세 확장과

외연 확대를 위해 공동대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동대표제 도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장 상 전 선대

본부장이 한화갑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 기미, 검은반점치료에

도미나크림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 크림은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등, 피부에 과도하게 침착된 멜라닌색소를 효과적으로 억제, 개선시켜 주는 치료를 위한 약용크림입니다.

도미나크림은 흐리빠른 헤드로 쿠션(주상분)에 T-포م의 크림기계를 복합적으로 제작시킨 약용크림으로서, 자외선에 의해 피부 투위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의 원인인 세소관(현상)을 깊숙하게 개선·치료하여 줍니다.

치료를 위한 약용크림

도미나



## 탈모증 치료제 모바린 액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제공 www.taiyuk.co.kr 080-300-3282